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닉슨·사토 공동성명과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이노우에마이

The Response of the Korean Media to the Nixon-Sato Joint Communique and the Return of Okinawa to Japan

-Focus on Dong-A Ilbo and Khyunghyang Shinmun-

**A thesis Presented
By
Mai Inoue**

**to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subject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ugust 2017

닉슨·사토 공동성명과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5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이노우에마이

이노우에마이의 석사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 년 7 월

위 원 장 이 근



부 위 원 장 남기정



위 원 박태균



Copyrights 2017 by Mai Inoue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아시아의 아시아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은 기지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국민의 심한 반발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여 오키나와 반환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9년 11월 21일 미국 대통령 닉슨과 일본 총리 사토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오키나와 반환이 현실화되었다. 공동성명에 있어 한국조항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된다고 해도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일본은 반환 이후 극동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안보적으로 고생을 겪고 있던 한국을 배려한 내용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안보적인 위험을 방지 또는 연화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본론에서는 공동성명 및 한국조항을 통해서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적인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어서 안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일관해서 반환 이후도 존재하는 미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국내 좌경 세력, 자주 외교 및 공산국과의 대외 관계 등에 대한 비판은 둘 다 전개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처음에는 일본의 역할을 한국 및 자유잔영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으로서 받아들였으나 중공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하여 진영논리를 이용해 단락적으로 결론을 이룬 자기 자신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의 마음을 보였다. 다만 일본의 극동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중시 의견을 바꾸지 않아 한국 및 세계에 대한 큰 공헌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가 없이는 극동 지역에서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에 있어서 일본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주시할만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된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시기부터 일본의 역할을 경제 지원이라는 특정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일본의 역할은 이전의 미국 역할을 대체하는 큰 역할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포함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견해에 어느 정도 양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감축이 그다지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찰과 한국의 자주 방위를 위한 국군 현대화 등 모든 요인들을 감안한 끝에 이끌어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계속 북한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향도 동시에 지켜봐야 되었었고 이성과 감정, 현실과 이상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다시 한국전쟁이 벌어진 계기 같은 위험성이 모리를 스쳐 지나가고 반면 무조건 미군의 철수 및 일본의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위치에서 자기 생존을 생각해야 되었던 것이다. 그 자세는 물론 진영 논리를 완전히 빠져나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세계 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닉슨·사토 공동성명, 오키나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안보

학 번 : 2015-25063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1
--------------	---

제2장 닉슨·사토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일의 입장

제1절 닉슨·사토 공동성명과 한국조항	6
제2절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의 입장	11
제3절 공동성명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1960년대 일본 국민의 안보 인식	13
2) 미일 정부에서의 국내 통제	16

제3장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발표 전

제1절 전체적인 기사 수의 추이	19
제2절 동아일보	
1) 1967년부터 1969년 3월까지	23
2) 1969년 4월부터 발표까지	27
제3절 경향신문	32

제4장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발표 후

제1절 동아일보	37
제2절 경향신문	43

제5장 결론	47
--------------	----

참고문헌 / 외국어 초록

제 1 장 서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특히 1960 년대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베트남전쟁을 비롯하여 냉전 논리 하에서 열전을 벌이게 되고 큰 움직임을 진영 혹은 각 국가마다 느끼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냉전을 이해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진영 논리가 국민국가의 논리를 언제나 압도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 제 3 세계에서는 냉전진영에 대한 가담여부가 민족 해방(독립)과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었으니 진영과 국민국가와의 관계(호흡과 모순)를 고려해야 한다.¹

이것은 1960 년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물체를 국민국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냉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한국 / 미국 / 일본의 자유 진영의 삼국을 비교해보아도 냉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바라보느냐는 각인각색이다. 1950 년부터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과의 관계를, 즉 냉전의 위협을 제일 가까이에서 느끼고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세계대전 패전 후 시행된 평화 헌법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생활평화주의²를 누리고 있었다. 일본의 냉전에 대한 접근도 역시 베트남전쟁이 그랬듯이 ‘바다 건너 불’³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일간에서의 안보에 대한 상반되는 상황은 1960 년대 후반이 되자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¹ 권혁태 선린학생회관과 중일관계 국민국가의 논리와 진영의 논리 중국현대문학 제 60 호 pp.191-218 1225-0716 KCI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년

² 생활평화주의는 베트남전쟁 때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이 전쟁과 괴리된 안전지대였고 생활인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는 그것에서 올라온 평화주의의 연약한 줄기였다고도 한다.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베평련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6 집 2 호) 2014 년]

³ Havens, Thomas R. H.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한일간에서 안보 협력 체제를 모색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쪽이 극단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타협하면서 협력을 이루려고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즉 1969 년에 미국 대통령의 R. 닉슨과 일본 총리의 사토 에이사쿠가 발표한 닉슨 · 사토 공동성명에서 명기된 한국조항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협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닉슨 · 사토 공동성명을 비추어 볼 때, 특히 일본에서 이는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발표로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기존 연구도 역시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미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어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⁴ 이 시기의 한일 관계를 분석한 빅터 D 차는 닉슨 · 사토 공동성명 및 한국조항을 한일 두 정부가 처음으로 양국간 안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⁵ 게다가 서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 같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은 한일 관계를 유사동맹 모델로서 설명하고 있다. 유사동맹 모델에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동맹국이 자국의 명백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이 기대되는 위급상황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유사동맹에 해당되는 국가에는 방기가 발생하고 대개 동맹 공약이 자국의 이익에 해롭게 작용될 경우 연루가 된다고 한다. 1960 년대 후반,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바꾸자 한국과 일본의 방기를 유발해서 한일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시켰다고 하였다.

반면 이 시기의 한일 안보 관계를 한미일의 외교문서를 써서 분석한 최경원은 결과적으로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조항이 제기되었으나 한일간에는 다른 정세 인식과 안보 정책을 배경으로 안보 마찰이 발생하였다고

⁴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45-1 호) 2011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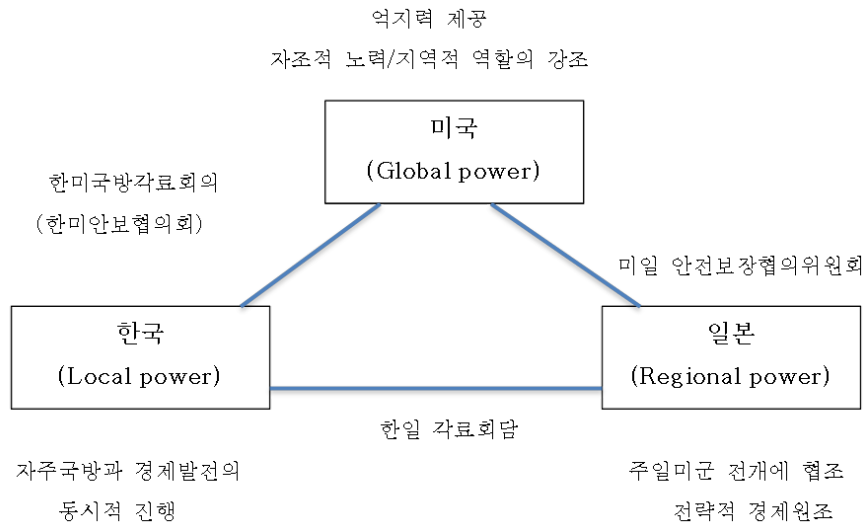
⁵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문학과지성사 2004 년

주장한다.⁶ 쌍방의 외교적인 노력은 미국의 반대로 실패가 되버렸고 결국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조항은 상반하는 한일간의 입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안전 보장의 공공재를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 조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은 안정 보장을 지키고 싶은 한국과 긴장 완화를 요청하는 일본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의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최희식⁷은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한국조항을 미일관계에 있어 한국조항이라고 하여 전시 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규정하고 오키나와 반환과 더불어 일본은 핵우산 제공에 결정적이었던 오키나와의 역할을 일본이 수용할 것을 밀약함으로써 국동안보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1968년 에 개최된 제2차 한일 각료회담에서의 내용을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조항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자주국방과 고도경제성장의 병행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협조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조항을 명시화시키는 의미로 미일관계에 있어 한국조항이 생기게 되었다는 주장도 많이 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희식은 1969년 형성된 한미일 협력관계의 냉전적 원형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하였다.

⁶ 崔慶原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⁷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45-1호) 2011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교적 아니면 정치적 측면에서 한일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1968 년부터 시작된 한일간에서의 안보 협력 체제 형성 과정을 기존 연구를 도대로 먼저 재정리하여 당시 한국 / 일본이 서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느냐를 확인하고 협력 체제가 형성할만한 요인들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다루고자 한다.

닉슨 · 사토 공동성명 및 한국조항을 통해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적인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있지만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어서 안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당시 같은 자유 진영에 속하면서도 협력하기 쉬웠다고 상상하기에는 힘들다. 1969 년 4 월이 되자 닉슨 · 사토 공동성명의 오키나와 반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국의 국회나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오키나와 반환 문제 즉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을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신문 사료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 사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2 개의 사료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동아일보는 비교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도하는 언론 매체이었고 반면에 경향신문은 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관점으로 보도한 매체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서다. 그 이외의 신문 사료들을 분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박정희 정부 밑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 및 연구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면서도 1960년대 후반에서의 한국의 언론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 지속되는 한미일 간의 갈등에 새로운 시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닉슨 · 사토 공동성명과 오키나와 반환이 무엇을 국제 사회에 가르쳐주었는지 또한 그를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장 닉슨·사토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일의 입장

닉슨·사토 공동성명은 1969년 11월 21일에 미국 와싱턴에서 발표되었고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 패배한 후, 미국이 계속해서 통치해온 오키나와를 정적으로 일본에게 반환할 것을 밝히었다. 이 공동성명은 일본은 물론이고 극동 지역 전역을 끌어넣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는 세계 대전 이후 극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우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미국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도 오키나와를 ‘태평양의 키 스톤’으로 평가하였던 정도이었다.⁸ 따라서 오키나와 반환을 밝힌 이 공동성명은 뜻대로 오키나와가 일본에게 반환된다는 미일관계에서의 의미를 넘어서 반환 이후 미국 혹은 오키나와가 어떠한 형태로 극동 지역의 안보 역할을 할 것인가 등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도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이에 입각하여 닉슨·사토 공동성명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생각하고 싶다.

제 1 절 닉슨·사토 공동성명과 한국조항

우선 1969년 1월에 탄생한 닉슨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살펴보자. 닉슨 대통령의 대일정책은 같은 해 5월 28일에 승인을 받았던 NSDM-13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에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후의 구체적인 대일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반영되는

⁸ 小熊英二〈日本人〉の境界-沖縄・アイヌ・台湾・朝鮮 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 新曜社, 1988. 제 18 장 境界の島々

기본 방침이 되었다.⁹ NSDM-13 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방어력을 원만하게 증강하여 질적으로 향상하는 노력을 장려하려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큰 병력이나 지역 안전 보장에서의 큰 역할을 발전시키려고 일본에게 압력을 주는 것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더구나 오키나와 반환 문제를 건드리면서 한국, 대만, 베트남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미군 기지를 최대한 자요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청하였다.¹⁰ 즉 일본은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을 감소하고 보다 자주적 방어력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극동 지역의 안보적 측면을 배려하여 오키나와 반환을 실시할 것을 요청되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의 사토 정권은 ‘핵무기가 없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核抜き・本土並み) 반환’을 목표로 하였고 반환 후의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와 같이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사전 협의(事前協議)’의 대상이 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평화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반환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아니라, 주일 미군의 극동 방위 역할을 ‘방해하지’ 않고 이에 협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었다¹¹는 주장은 외교 문서나 공식 성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사실 미국은 보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틀 전 19 일에서 시작한 닉슨·사토 회담에서는 NSDM-13 에서 결정된 일본의 방어력 증강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⁹ 松村孝省・武田康裕 1978 年「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策定過程 米国の意図と影響 国際安全保障 第31 卷第4 号 p79~98 [瀬川高央 日米防衛協力の歴史的背景-ニクソン政権期の対日政策を中心に- 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 年報 公共政策学 2007 年]

¹⁰ “NSDM 13:Policy toward Japan” (May 28th 1969),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iche 01074

¹¹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45-1 호) 2011, 崔慶原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년

논의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오키나와에 구매되지 않아 더 전반적인 미일 안보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게 반환하는 결과로, 오키나와의 미군의 기능이 약간 약해진 결과가 될 것은 각오하고 있고 또 일본의 헌법상 문제도 알고 있지만 핵 능력과는 별도로 일본이 significant military capacity를 develop 하는 것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¹² 이에 대해서 사토 수상은 일본이 순수히 군사적으로 세계 평화의 유지에 참가하는 것은 무리하지만, 경제 협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핵 3 원칙을 설명 후, 대통령의 말씀도 순수한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자신(대통령)도 물론 일본의 경제 협력이 간접적으로 안전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말한 significant military capacity 는 통상 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였다고 답하였다.¹³ 때문에 총리는 일본으로서는 이후 ‘하늘(空)’ 및 ‘해상(海上)’을 중심으로 자위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고 닉슨 대통령은 이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¹⁴

오키나와가 반환된 경우, 복귀 후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자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은 사토도 잘 알고 있었다. 실히 오키나와가 일본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great power responsibility 을 assume 하는 것은 미국은 요구(demand)가 아니라 사실 문제(statement of fact)임을 주장하고 있었다.¹⁵ 미국이 일본에게 군상력을 증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의 근거는 공동성명 당일 21 일 오전에 열린 장상 회담에서도 알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은

¹² 佐藤総理・ニクソン大統領会談（第三回十一月二十一日午前）p.778~791
 和田純・五百旗頭真 楠田實日記・佐藤栄作総理首席秘書官の二〇〇〇日
 東京：中央公論社 2001

¹³ 동상

¹⁴ 동상

¹⁵ 동상

공동성명에 관한 의회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의원 중에는 일본이 일본 이외(beyond Japan) 방어에의 더 큰 역할에 대해 기대하였다. (중략) 자신도 동감하지만, (중략) 일본이 경제면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면에서도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storing feeling 이 있다. (중략)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major role 은 담당할 수 있어도 predominant role 은 할 수가 없다. (중략) 그래서 자유 진영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¹⁶

닉슨 대통령이 이 회담에서 말하였던 내용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안전 보장 정책 및 군사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전혀 안 맞는 일이다. 사실 공동성명에 일본의 구체적인 역할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1969 년의 닉슨·사토 정상 회담 및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통상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마찬가지로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한국조항은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 생기게 되었고 그 내용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며, 중공이 대외 관계에서 보다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기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¹⁷ 이것은 전후 일본이

¹⁶ 동상

¹⁷ 한국조항은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 4 항을 가리키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리 대신과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 여전히 긴장 상태가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총리 대신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다고 말하였다. 총리 대신과 대통령은 중공이 그 대외 관계에서 보다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기대하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처음으로 공식으로 한국 및 한반도의 안전 보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 사토는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거기에서도 한반도의 유사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¹⁸

특히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한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 지역을 전투 전략 행동의 발진 기지로 사용해야 되는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서서 사전 협의에 긍정적이고 신속한 태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토의 ‘긍정적이고 신속한’이라는 문구는 만일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에게 오키나와 기지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즉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된다고 해도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안보적으로 고생을 겪고 있는 한국을 배려한 내용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안보적인 위험을 방지 또는 연화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실제로 핵무기를 배치한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이 냉전을 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적으로 냉전을 외부인처럼 접하고 있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外交青書)第14号昭和44年度(1970年)第三章 I 資料 3-(6) 佐藤栄作総理大臣とリチャード・M・ニクソン大統領との間の共同声明

¹⁸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外交青書)第14号昭和44年度(1970年)第三章 I 資料 2-(5) 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における佐藤総理大臣演説

제 2 절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의 입장

당시 한국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에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은 정치적/안보적 이유로 베트남에 병사들을 파병시켰으나 그 공백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1954~1992 년까지 한국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계열라는 약 3,693 명인데 이 중 1967~1968 년 기간에 무려 743 명이 침투하였다.¹⁹ 1968 년 1 월 21 일에는 무장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였고(청와대 습격 사건), 이어 23 일에는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the USS Pueblo)호와 승무원들을 나포하는 사건(푸에블로호 사건) 등이 발생하여 안보 위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키나와 반환이 실시될 것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할만한 요인으로 충분히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시종 일관해서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고 오키나와에서의 무력 해제, 즉 미군 철수 및 본토 수준의 반환에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사토 총리가 1969 년 3 월 11 일에 오키나와의 ‘본토 수준’의 방침을 밝히자 같은 달 15 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1950 년 1 월에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 장관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원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오키나와 반환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영토 내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한 미군기지를 강화하거나 증설하거나 해서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⁰ 실제로 한국에서는

¹⁹ Dick K. Nanto,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2003,”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3), p.4. (<http://fas.org/man/crs/RL30004.pdf>, 검색일: 2015 년 5 월 20 일).

김성주 1960 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현대북한연구 18(2), 2015.8, 270-309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²⁰ 한국일보 1969 년 3 월 16 일(崔慶原 冷戰期日韓安全保障關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년), 동아일보 1969 년 3 월 25 일

실현만 하지 않았지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안까지 내고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도 오키나와에 배치되고 있는 핵 미사일을 반환 이후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²¹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군사 도발에 가하여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환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었던 가운데 일본이 제시한 본토 수준의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하게 되면 한국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미군기지의 유용성이 극대화되는 현상 유지를 도모하였고 미군기지의 가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을 비롯한 지역 내 국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을 요망한 것이다.²²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대조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항상 일본의 북송 문제 등에 대한 혐오감을 표명하였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인도적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의도와 달리 오키나와 반환의 실현을 기다리는 일본은 동아시아 정세가 오키나와의 군사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즉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이런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일이 서로가 양보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핵무기의 철수는 실시되었지만 미군기지의 자유 사용이 인정되었고,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적인 연계 및 협력이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안보적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이견은 물론, 애초에 북한이라는 한국과 대치하는 국가에 대한 관점도 일치하지 않았던 한일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요청한 극동 지역에서의 집단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기대한 극동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의 사이에서 정착하였다.

²¹ 동아일보 1969년 3월 31일

²² 외교문서 동북아주과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문제 V.1 1969.1-6월 1969년

²³ 崔慶原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년

제 3 절 공동성명에 대한 일본의 입장

닉슨·사토 공동성명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에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안보 인식과 국내 정세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로 발전하고 미국과 일본이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반환을 단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 빅터 D 차도 지적하였듯이 1968년의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환으로, 즉 한일간에서 방기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서 안보 협력을 모색하였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 정세와 정부의 안보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볼 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성명에서 한국조항이 명시화 되었다고 해도 한일간의 안보 인식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찾으려면 일본의 안보 인식과 국내 정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 1960년대 일본 국민의 안보 인식

일본 사회에서의 1960년대는 1950년대에서 이어지는 대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특히 1960년대의 대중 운동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과 연결시키면서 이루어졌다. 이들을 근본적으로는 반미가 아니라 반전을 주장하고 있었다고도 한다.²⁴ 하지만,

²⁴ Havens, Thomas R. H.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베트남 전쟁의 종료 시기를 1973 년의 파리 협정 또는 1975 년 사이공 함락으로 정의한다면 일본의 반전 대중 운동이 1970 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게 되는 것²⁵은 웬지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반전 운동의 주체가 된 베헤이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 연합)이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이라는 원리를 내세우면서도 개인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국적, 즉 ‘일본인’을 기동시킴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본국 헌법의 우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²⁶ 즉 반전 운동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1960 년대 일본 사회가 가지는 미국에 대한 요구나 불만이 ‘반전’이라는 슬로건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일본인에게 목표이기도 하면서도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나 미국과의 군사적 주종 관계에서의 탈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²⁵ 平井는 약 9 년간에 걸치는 베헤이렌 활동을 시기별로 4 가지로 분류한다. 1970 년부터 71 년까지는 운동이 점차 진정되면서 지역 베헤이렌 활동의 자세를 둘러싸고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 시기라고 규정한다. 平井一臣 戦後社会運動のなかのベ平連 -ベ平連運動の地域的展開を中心に- 『法政研究』 第 71 巻 第 4 号, 355-387 2005

²⁶ 일본인 미군 탈주 병사인 시미즈 테즈오의 사례는 베헤이렌의 모순을 부각시켰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미일 지위 협정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일본의 주권의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이며, 미군 병사의 탈주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미군에 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본인 미군 병사 시미즈 테즈오의 출현으로 베헤이렌 혹은 일본 사회는 일본국 헌법, 평화 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시미즈는 일본 국적자이니 일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미군으로서 지위 협정과 형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인 존재이었으나 1968 년 주일 미국 대사관은 시미즈의 체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반전 운동 단체로서의 베헤이렌 활동 속에서 시미즈의 사례는 베헤이렌 및 일본 국민이 일본국 헌법에 의해 평화가 담보되어 있음을 ‘일본 헌법’ 혹은 ‘평화 국가’ 즉 “일본”과 연결시키면서 인식하려고 함으로써 일본인으로서의 강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권혁태 ‘국경’ 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 일본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탈영병사 東方学志 제 157 집 2012 년 3 월 113~116 쪽)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 두게 된 일본은 1951 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고 독립을 회복하였는데 이후도 미국과의 식민주의적 종속 관계를 단절한 국가로 독립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강화 조약과 동시에 맺어진 안보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주종 관계가 유지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손상 및 불안정성에 의거된다. 시대적인 연속을 고려한다면 1957 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키시 노부스게(岸信介)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의 회담에서 안보 조약을 통해서 양국간에는 군사적인 영역 이외에도 이해가 일치하는 점이 있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²⁷ 사실 일본에서 안보 반대 운동이 나날이 커져 가는 가운데, 미일 정부의 관심사는 미일 안보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일 정부는 1960 년에 워싱턴에서 체결된 신 안보 조약에서 이전의 안보 조약의 불비를 시정하고 그와 관련된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일 안보 조약에 관해서 일본 국민은 체결 협상 때부터 1960 년대에 걸쳐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었고 미일 안보 체제가 여론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69 년 9 월 시점에서는 미일 안보가 일본의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7%로 되었고, 1970 년 6 월에는 안보 찬성이 37%, 안보 반대가 14%, 1971 년 5 월과 1973 년 7 월 조사에서는 모두 찬성 34%, 반대 20%를 기록하며 1974 년 11 월에는 찬성 34%, 반대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970 년에 들어 안보 찬성이 우세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²⁸ 따라서 1960 년에 개정된 신 안보

²⁷ MacArthur to Dulles, telegram 2331, April 17, 1957 and telegram 2332, April 17, 1957, Department of State Central Files. National Archives.

²⁸ 『朝日新聞世論調査 30 年史』 上下巻 朝日新聞世論調査室 1976 年 6 月 92,97,99,107,110,127 頁

조약은 어느 정도 국내의 불만이나 목적을 달성한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신 안보 조약이 체결된지 10 년 정도 지난 후인 1970 년을 전후한 시기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일 안보 관계를 포함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안보 조약이 개정된 후에도 여전히 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의 복잡함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인이 지닌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정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였고 회의와 비판을 수반하는 대중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2) 미일 정부에서의 국내 통제

이에 입각하여 오키나와 반환, 닉슨 · 사토 공동성명을 감안할 때, 1960 년대 미일 정부는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베트남 전쟁, 오키나와 반환 문제, 70 년 미일 안보 문제가 상호 연결하면서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키나와 반환이 미일 쌍방에서 만족스러운 형태로 실현하느냐 아니냐가 그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점을 통찰하고 있었다.²⁹ 오키나와 문제의 처리를 잘못하면 70 년 미일 안보에서 ‘자동 연장’을 노리는 미일 정부의 목적은 무너져버리며, 그것은 미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양 정부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우려된 것이다. 그래서 사토 총리는 오키나와를 바로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1970 년에 안보 조약이 논의될 때 류큐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공격이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70 년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³⁰ 닉슨 ·

²⁹ 菅英輝 『冷戦と日米安保体制-安保改訂交渉から沖縄返還交渉まで』 比較社会文化 第9巻 (2003) 69~83 頁

³⁰ 菅英輝 앞의 논문 『比較社会文化』 第9巻 (2003) 69~83 頁

사토 공명이 1969년 11월이라는 시기에 발표되어 오키나와 반환이 72년에 실현한 것은 일본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발을 억제시켜 보다 심한 반미화에의 가능성을 저지하고 미일 안보 관계의 긴장 요인을 제거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의 일본 본토에서의 대중 운동은 일본인의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1960년의 안보 개정에서 완전히 달성되지 못하였던 종속적인 미일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일 정부는 미일 안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이는 일본 국민의 요구와 정면충돌하였다. 안보 측면에서 종속적 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운 미일 정부는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오키나와 반환을 삼고 종속적 관계에서의 개정 노력 및 협력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일본 본토의 대부분에게는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였고 그것은 일본 본토에서 대중 운동, 반전 운동이 갑작스럽게 종식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본에 입장에서 닉슨·사토 공동성명을 되돌아볼 때, 그것은 일본 정부의 국내적인 퍼포먼스로 작동되고 있었고 일본 국민의 내셔널리즘 관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쳐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발표 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 관한 미일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언론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신문 사료를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선택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선택한 것은 서론에서도 논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가까운 입장이었던 경향신문과 반대 입장이었던 동아일보를 둘 다 파악하기 위해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한국 언론이 오키나와 반환 및 닉슨·사토 공동성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이를 통해 극동 지역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의 한국조항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된다고 해도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겠다는 것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 안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본이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의 자유 진영 논리를 강화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진영 논리를 어디까지 인정하였는지 아님 거절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한국이 닉슨·사토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바랐는지 본론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전체적인 기사 수의 추이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닉슨·사토 공동성명, 한국조항 및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관한 기사 수의 추이를 조사한다.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은 공동성명 혹은 한국조항이라는 말로 보도된 기사의 수는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한국조항에 이르러서는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름은 1969년 11월이 되어 등장하고 그 이전에는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에 오키나와에 관한 보도는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시키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보도하였었다. 또한 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동아일보도 경향신문도 당시 오키나와를 ‘오키나와’라고 표하고 있었고, 동아일보의 경우 1974년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오키나와로 변화였다. 연도별로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의 수를 비교할 때, 1968년에 64건이었던 기사수는 1969년에는 302건까지 늘어났다. 1969년에는 거의 매일 보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70년은 134건, 71년은 175건, 그리고 실제로 오키나와가 반환된 72년에는 138건이 되었고 이후는 감소하게 되었다. 이를 보아도 1969년에 오키나와에 관련한 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의 안보에 관련한 기사 수와 비교할 때 보다 뚜렷해진다.

표 1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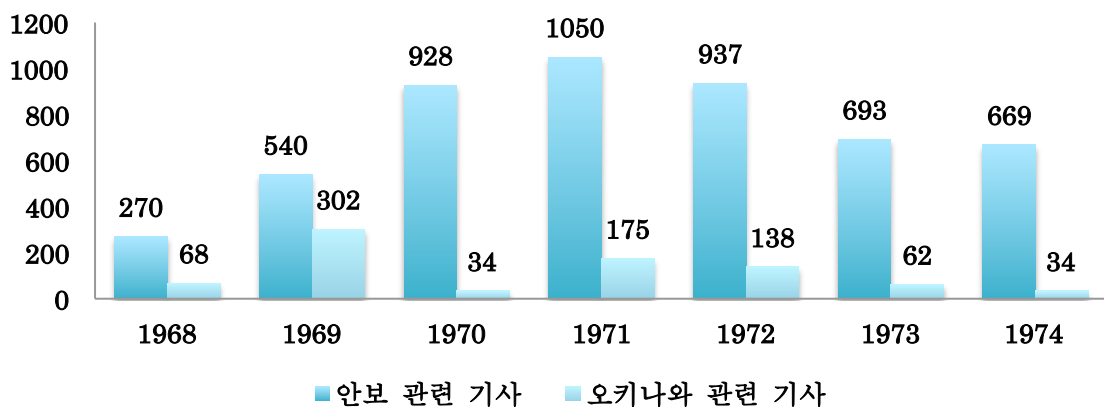


표 2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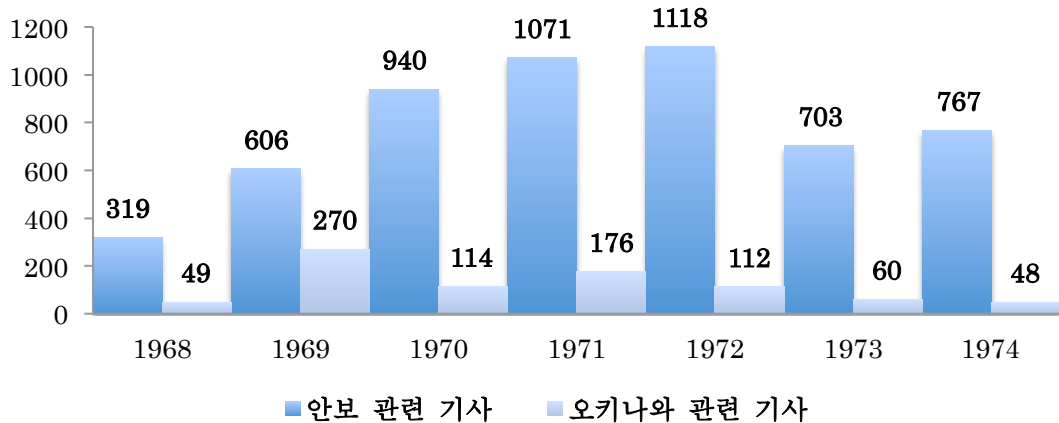


표 1, 2 는 1968 년부터 1974 년까지의 안보에 관련된 기사와 오키나와에 관련된 기사를 비교해서 만든 표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보 관련 기사와 오키나와 관련 기사의 수치는 1969 년만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가 한국의 안전 보장과 연결하면서 보도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생각한다면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안보적인 관심이 1969 년 당시 그만큼 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1969 년에 보도된 기사들을 각각 월별로 구분하였을 때 (표 3, 4), 오키나와 관련 기사가 특별히 많은 4 월, 5 월, 6 월, 8 월, 11 월에는 안보 관련 기사도 비교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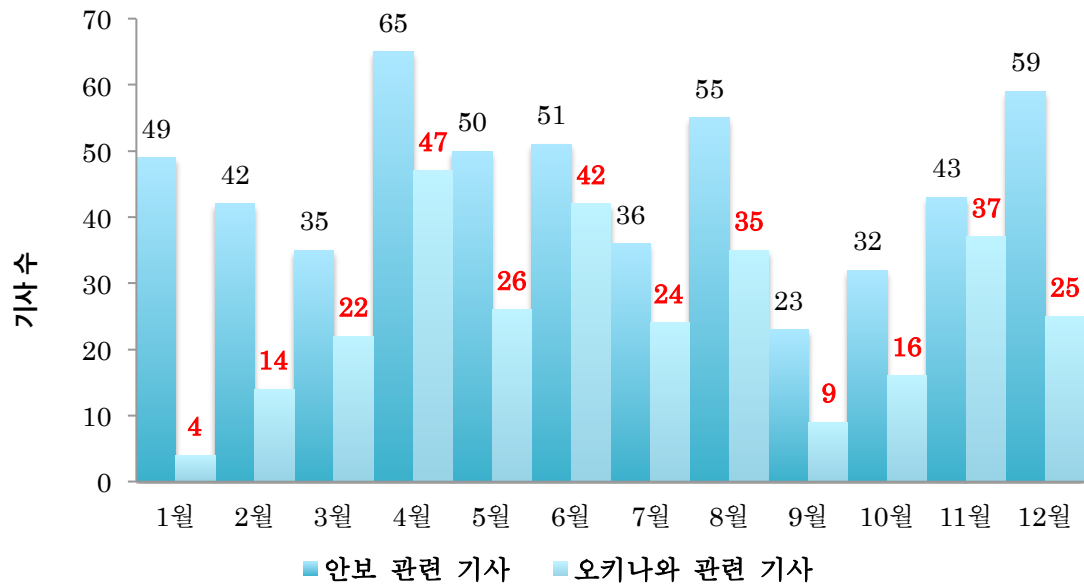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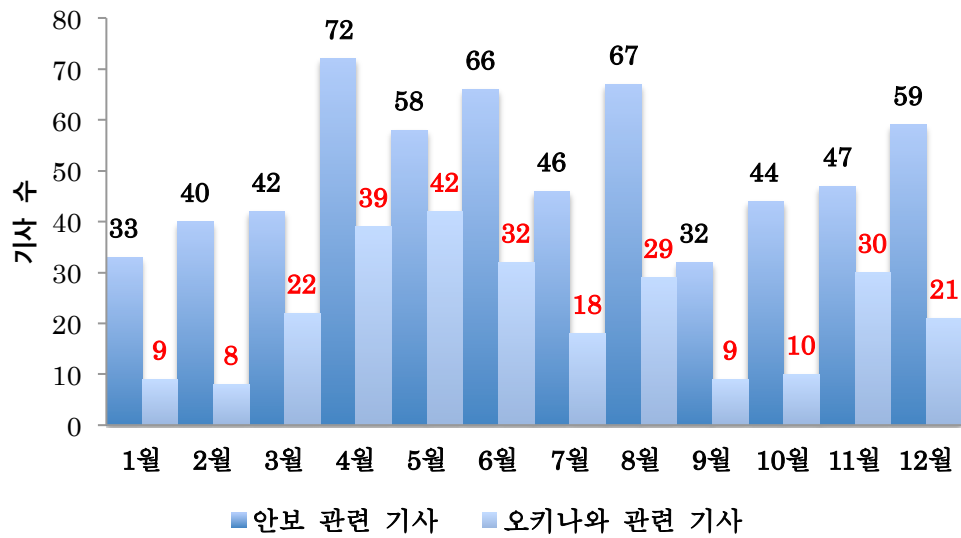


표 4 경향신문



이를 보기만 해도 4 월 이후의 기사 수는 많아졌고 미국이나 일본이 요청한 바와 같은 통제를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8 월에 안보 및 오키나와 관련 기사가 많아진 것은 1969 년 7 월 25 일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것을 받아 8 월에 안보 및 이와 연결시켜 오키나와 문제가 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된다. 11 월은 공동성명이 발표하였으니 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발표 전의 기간을 2 개로 나누어 기사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동아일보

1) 1967년부터 1969년 3월까지

1966년까지 오키나와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보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었고 1967년 11월이 되어도 미국의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대통령과 사토 총리와의 존슨·사토 회담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장내 문제에 대한 화제가 다루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정도였다.³¹ 동년 12월에는 학생 운동이나 대중 운동이 심해지는 일본의 국내 정세를 설명하여 오키나와를 “政治 孤兒(정치 고아)”로 표현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가지는 복귀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도 나오면서도 그를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는 보도하지는 않았다.³²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서의 군사적 및 안보적 측면을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1968년 4월 6일이였다.³³ 이 기사는 일본의 중공 접근을 우려한 기사였지만 “일본의 당면정치 문제로 돼있는 안보/방위 문제, 오키나와 반환문제 등도 이 대중공문제와 함께 월남전협상에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한국의 안보 문제인 대 중공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해 6월이 되면 한일간에서 비공식으로 오키나와에서의 핵 무기와 다른 중요한 시설이 제주도에 이전한다는 것을 일보의 요미우리 신문이 밝히면서 이를 보도하고 7월이 되자 이에 대해 미국이 부인한 보도 등이 나왔으나 모두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이고 오키나와와 한국의 안보 관계를 시사하지 않았다. 사실 1968년에 들어가서도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군 폭발기’

³¹ 동아일보 1967년 11월 15일 2면 아주안보토의 존슨·사토회담

³² 동아일보 1967년 12월 9일 4면 일본학생운동의 한계 '대학자치'와 규제[하], 12월 12일 6면 정치고아 오키나와 현지서 본 일본복귀문제

³³ 동아일보 1968년 4월 6일 5면 “존슨성명”의 엉뚱한 파문 일본의 중공접근

오키나와에서 출격 등의 내용과 일본에서의 퍼진 대중 운동에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키나와 반환 문제를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거의 다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보도의 추이는 1969년 2월 말이 되자 갑자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월 중반까지는 한반도의 안보가 오키나와 반환을 인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보를 인용하면서 보도하고 있었고 한일 정부나 각료에서 정보도 일본의 신문에서 인용된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1969년 2월 18일에 오키나와에 있는 핵무기는 북괴(北傀)의 무모한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미군소식통의 말을 1면에 보도한 기사를 시점으로 해서 보도가 과열되었다.³⁴ 이어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북괴 침략에 대해 눈 앞에 뚜렷이 보이는 견제력(牽制力)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을 드면서 오키나와에 배치한 핵무기의 필요성을 미국이 언급하자 바로 큰 오키나와 관련 기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오키나와를 핵 자유 사용 기지로 계속 존속시킬 필요를 주장하게 되었다.³⁵ 이러한 흐름은 동년 3월 초반까지 계속하다가 13일에는 처음으로 1면 톱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는 2월 후반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³⁴ 동아일보 1969년 2월 18일 1면 오키나와 핵무기 북괴도 겨냥 미군소식통말

³⁵ 동아일보 1969년 2월 21일 1면 오키나와 미핵무기 북괴의 망동 견제 목적,
동아일보 1969년 2월 22일 아시아 안보의 진통

총괄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으로 ① 중공과 북괴를 대상으로 한 미국 핵 억제력의 결여 ② 북괴가 오산하여 재침하는 가능성 가증 ③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를 기지로 이용하는 미군의 대한지원 작전에 대한 제약을 들었다.³⁶

아울러 15일의 사설에는 미일양국간에 이미 교섭된지 수년을 헤아리고 있건만 한국 정부가 이제야 이 문제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불만을 표명하고 오키나와 반환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장차의 세계 정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극히 중대한 문제라고도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나와의 본토 수준 반환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극동지역의 안보 문제를 위하여도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탓하였고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정세와 이시아 대륙에 도사리고 있는 중공의 정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⁷ 아울러 방위력이 없는 일본에게 미국 없이 힘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 나라들과 고락을 같이 하고 도와준다는 풍도를 갖지 못하는 일본을 비판하였다. 31일 경향신문에도 보도하듯이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의 오키나와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³⁸

사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오키나와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오키나와 반환 및 공동성명이 극동 아시아에서의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또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극동 지역의 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알면서도 가능한 한 그에 발전시키고

³⁶ 동아일보 1969년 3월 13일 1면 오키나와 반환문제

³⁷ 동아일보 1969년 3월 15일 사설 오키나와와 극동 안보

³⁸ 경향신문 1969년 3월 31일 3면 한국 방위력 증강 오키나와 미기지 필요없어

싶지 않는 내심에서 일본의 국내 문제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포함한 한국과의 정세 파악의 차이, 국내 정치의 우선 등에 의거된다. 일본은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한국을 ‘제삼자’로 부르면서 미일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개입을 비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오키나와를 극동 지역의 군사적 요충이라고 부르고 아시아 지역의 집단적인 안전 보장 문제와 직결되어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2) 1969년 4월부터 발표까지

1969년 4월은 오키나와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된 시기였다. 이에 반응한 미일 정부는 4월 9일에 오키나와에 대한 한국의 혼란을 통제하기를 요청하였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사 수만을 보면 무의미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를 발견하였다. 먼저 4월 후반이 되면 될수록 북한이나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연결시키면서 오키나와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중반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오키나와 자체의 중요성 및 안보적 의의를 보도한 기사가 감소하였다. 게다가 5월이 되면 관련 기사 수도 감소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 보도 아니면 북귀 도발 문제에 부속적으로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 되었다. 이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4월에 보도된 오키나와 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4회에 걸쳐서 나온 ‘극동안보의 교두부 오키나와’라는 특집 기사다. 2월까지만 해도 거의 다루지도 않았던 오키나와 관련 보도는 드디어 특집 기사가 되고 또 극동 안보의 교두부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8일에 제 1회 ‘현지서 본 기지현황’이 1면에 나와 이후 2, 3, 4회는 4면에 나오게 되었다.³⁹ 제목을 보면 바로 알지만 제 2회는 가공할 공군파괴력, 제 3회는 보급·심리전의 구심, 마자막으로 4회는 해군·해병의 거대한 발판이고 오키나와가 가지는 안보적 측면에서만 집중해 보도되었고 모두가 미군기지 및 미군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뛰어난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계속해서 오키나와의 현상 유지를 원하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오키나와가 가지는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사 안에 ‘극동지역 최대의 군가기지 오키나와의 첫인상은 거대한 규모의 전략 정비에 업도되어 오키나와에 기지가 있는

³⁹ 동아일보 1969년 4월 8일 1면 극동안보의 교두부 오키나와(1)현지서 본 기지현황, 4월 10일 4면 (2)가공할 공군파괴력, 4월 11일 4면 (3)보급·심리전의 구심, 4월 12일 4면 (4)해군·해병의 거대한 발판

것이 아니라 기지 안에 오키나와가 있는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듯이 한국의 오키나와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로 미군의 군사력에 대한 언급 일색이었다. 즉, 오키나와에 대한 한국에 방응은 여전히 미군에 의거한 관점으로 보도되었을뿐 일본과의 유호관계나 현실적인 협력체제를 맺으려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에 는 힘들었다.

4 월 17 일에 나온 사설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시급하면 할수록 극동 지역의 안보 문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오키나와 기지의 더욱 큰 강화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⁴⁰ 더구나 이 사설은 오키나와 문제를 오키나와 기지 ‘강화’ 문제로 표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오키나와에 대한 안보적 역할에 대한 언급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도 5 월 후에 가까워지면 다루는 주제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설에도 극동 지역의 안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나 22 일에 나온 표(밑에 표를 참조)⁴¹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키나와 반환이 끼칠 영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데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국 안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적하였다.

<表>美國戰略의 변천과 오키나와基地의 機能

時 期 區 分	第 1 期 (1945~49)	第 2 期 (1950~56)	第 3 期 (1957~60)	第 4 期 (1961~68)	第 5 期 (1969~)
大 統 領	트루만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케네디존슨	닉슨
核抑制力思想	—	發 生	擴 大	完 成	完 成
軍 事 戰 略	動員戰略	大量報復	大量報復修 正	柔軟反應	柔軟反應
極 東 戰 略	日本占領	周邊戰略	周邊戰略	前進戰略	地域防衛體 制戰略
오키나와基地 의 主要機能	對日監視	B29, B47 의 發進中繼 基地	B47의 中繼 基地 戰術的核基 地	B52의 中繼 基地 戰術的核基 地 通常兵 力對峙 및 兵力의 前進 基地	?

40 동아일보 1969 년 4 월 17 일 2 면 북괴도발과 극동안보

41 동아일보 1969 년 4 월 22 일 3 면 미국 전략의 변천과 오키나와 기지의 기능

2 월 말부터 시작한 오키나와에 대한 안보적 / 군사적 보도는 4 월이 되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보도에 급변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 안보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생기면서 북한에 의한 도발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해야될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을 보완하는 것 처럼 5 월이 되자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는 사실 보도와 북한에 대한 기사에 부속적인 요인으로서 나오는 것 이외의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졌다. 즉 4 월에 전개된 기사 내용, 미국의 군사력이나 오키나와 중요성을 주장하는 기사는 하난도 없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미일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맞이할 것이 예상되는 국면을 앞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고 한 자세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6 월이 되어도 지속되었다. 즉, 오키나와 혹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4 월에 전개된 보도와는 전혀 달리 북한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부속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사실을 늘어 놓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이미 오키나와가 반환된 것이 과거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정도였으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한국에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다.⁴²

하지만 7 월 그리고 8 월이 되면 드디어 오키나와에 관한 기사는



⁴² 동아일보 1969 년 6 월 3 일 1 면 핵무기 한국 이동, 6 월 2 일 1 면 한국군 현대화로 북괴 봉쇄

사실 보도 이외는 없어졌고 미군 기지 이동을 주장하는 기사마저 사라졌다. 이것은 7 월 25 일에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 따라 아시아 정책이 변화된 영향도 꼭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8 월에 나온 안보 관련 기사 안에는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에 따른 아시아 안보를 재검토하는 기사가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 닉슨 독트린 이후는 오키나와 관련 기사와 안보 관련 기사는 특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은 역시 4 월의 후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물론 4 월까지는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안보적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언급이 굉장히 많았지만 5 월부터는 갑자기 북한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다. 그것은 오키나와 반환에 대해 포기하였다고 말하기보다 한국이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사실 5 월부터의 오키나와 관련 기사 및 안보 관련 기사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대비’ 나 ‘대책’ 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었다. 10 월에는 한국에서의 70 년대 안보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나 북한과의 위기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었다.⁴³ 이제 한국에서는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집중해서 그를 근거로 한 안보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보도는 11 월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어도 일관하였다. 오키나와가 한국 안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시 한번 사실 보도에서도 재확인하긴 하였으나 큰 주목은 4 월과 비교하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⁴⁴ 하지만 놀라운 것은 24 일의 사실에서 미일 쌍방이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군사적 평가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일본 국민들의 오키나와 보핵반대 여론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적 조치를

⁴³ 동아일보 1969 년 10 월 2 일 7 면 70 년대 안보

⁴⁴ 동아일보 1969 년 11 월 18 일 1 면 오키나와 한국안보 직결, 11 월 14 일 1 면 오키나와 반환 한중방위 배려

필요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부분이다.⁴⁵

즉 일본의 국내 정세와 공동성명에 의한 국내의 안정화 및 국내에 향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견해였느냐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공동성명과 한국조항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한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거대한 국력으로써도 아시아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면 누가 성공적으로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도 나타냈다. 여전히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아시아 국세가 변화할 것에 대해 큰 불만은 남겼지만 일본에서 배워야 되는 좋은 점도 포함해서 비판하였고 기사를 보기만 해도 미국의 전환이나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⁴⁵ 동아일보 1969년 11월 24일 2면 사설

제3절 경향신문

발표 전까지의 경향신문은 오키나와 반환 문제 및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해서 사실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설이나 칼럼, 기획, 좌담에서 다루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보도 이외에서 회사로서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의 결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안보 측면에서 오키나와 반환에 관련된 기사가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1968년1월이었고 미군 기지가 한국에 이전하는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한국과 관련시키면서 오키나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없었다.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관한 보도는 1969년 3월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관련 기사도 많아졌지만 사실 보도 이외 기사에도 실제로 일본에 대한 언급보다 미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어 있는 기사가 거의 차지하였다. 즉, 1969년 3월이 되어 기사 수는 많아졌다고 해도 그 내용은 사실 보도이었을뿐만 아니라 미군의 철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씩 기사의 크기를 보아도 너무나 적었다. 경향신문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반환 문제 및 일본의 역할은 북한의 도발 문제에 비해서 큰 이슈로 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기사 비중은 박정희 대통령 및 북한에 관한 내용이 컸었다는 셈이다.



3월부터 4월까지의 사실보도와 미군 철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5월이 되자마자 흥미로운 연재를 시작하였다. 5월 초반에 상 / 중 / 하 3개로 나누어 연재된 그 기사는 ‘安保交叉路(안보교차로) 오끼나와 한·미·일 60년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⁴⁶ 이 연재는 오끼나와에 살던 사람들의 관점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정치적·안보적 관점으로만 보도되는 오끼나와 모습을 현지민의 입장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접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오끼나와를 군사적·정치적 구분하여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토에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안보 문제나 사전협의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시정권의 본토 반환이 전부인 것 같다.’⁴⁷ 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오끼나와인들의 기지 반환 형식에 대한 관심도는 미일 양국 정부의 정책적 절실성에 비해 떨어진 감마저 없지 않다.’⁴⁸ 고 결정지우면서 결국에는 오끼나와에서의 미군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일견 미국이나 일본의 관점을 떠나서 당사자인 오끼나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끼나와에 살던 사람들의 많은 고민과 고통을 전혀 무시한 견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끼나와 사람들은 오히려 기지 문제 등 군사적인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수단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해 본토 복귀를 부르짖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군사적·정치적 관점으로 오끼나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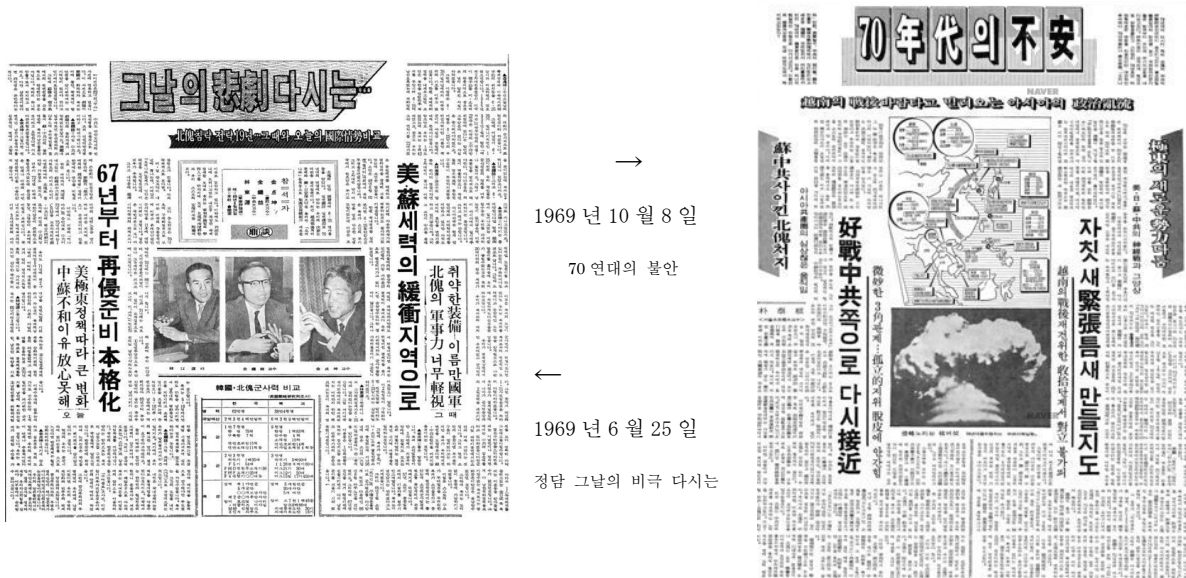
⁴⁶ 경향신문 1969년 5월 3일 1면 연재 安保交叉路 오끼나와 한·미·일 60년의 초점(상) 대공 핵초소, 경향신문 1969년 5월 6일 2면 연재 安保交叉路 오끼나와 한·미·일 60년의 초점(중) 정치·군사완연구별 기지 반환 논쟁에 조심스러운 눈치, 경향신문 1969년 5월 7일 2면 연재 安保交叉路 오끼나와 한·미·일 60년의 초점(하) 달러권 속의 현주민 머리 일식·속은 미식 사상누각의 가지 경계 혜택 누려

⁴⁷ 경향신문 1969년 5월 6일 2면 연재 安保交叉路 오끼나와 한·미·일 60년의 초점(중) 정치·군사완연구별 기지 반환 논쟁에 조심스러운 눈치, 경향신문

⁴⁸ 동상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키나와를 비핵원칙로 묶으면 극동 아시아 즉 한반도의 정세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러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접근이다.

사실 경향신문은 오키나와 반환 문제 및 반환 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못 주고 있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기 의식을 보다 심하게 인식하면서도 외세에 대한 기대는 가능한 한 줄여한국이 당사자로서 이 위협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항상 조심스럽게 나타나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보도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듯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한국 안보와 일본 역할에 대해서 드디어 발표까지 언급을 피하였다. 1969년 11월 21일에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26일이 되어야 처음으로 일본의 안보적 역할 및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되었다. 우선 경향신문은 오키나와가 반환됨으로써 주일

미군의 역할과 한국의 안보 문제는 직결하여 극동 지역에서의 한 / 미 / 일 세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굳히도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즉, 사토의 방미 및 오키나와 반환 일시의 확정으로 극동 안보를 둘러싼 주일 미군 기지의 성격과 그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키나와 반환과 동시에 체결이 현실화된 미일 안보 조약의 자동 연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일 미군 기지의 현상을 강화시킨 결과’⁴⁹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따라서 주일 미군 기지와 미군과 한국 안보 관계는 군사적으로 현상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게 될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군사 역할을 보완하기에 충분할만큼 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⁵⁰고 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하였다. 물론 이는 극동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까지도 포함시킨 형태로 살려야 된다는 견지에서 나타난 주장이다. 또한 주일 미군 기지는 일본 국민과 정부를 자극할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핵 무기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다고 하여 여전히 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국제 질서에 미칠만한 변화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일본 국민들의 핵 알레르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의 오키나와 반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는 이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변화, 즉 군사적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가리켰다. 따라서 이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낙슨의 최대의 양보라고 하여 그 대가로서 일본이 한국 / 대만 등에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협력하거나 미국과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냉전 대립을 넘은 공존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평화 공존 관계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과의 안보 인식 및 견해 차이도 명백히 하였다.

⁴⁹ 경향신문 1969년 11월 26일 3면 기사 오키나와 반환 뒤 한·미·일의 3각관계 군사 시설의 전략 가치 존속

⁵⁰ 동상



공동성명이 발표된 시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70 년대를 맞이할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할 수 있는 것, 즉 역할은 경제원조라고 언급하도 있다는 것이다. 70 년대 일본의 목표의 하나는 아시아 제국에 대한 비군사적인 협력이고 하며 이에 비판도 찬동도 안하였으나 ‘미국은 세계 및 아시아의 안전 보장 면에 책임을 지고 있으나

아시아 제국의 경제 원조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⁵¹는 주장을 보는 한 일본의 외교에적 자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경향신문에 있어서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은 일본의 정치적 안정이 사토 정권을 통해 이루어져 미국이 부담하고 있던 역할을 일본이 그 일부를 대신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현실적인 견지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대한 억제하려고 한 것이고 또한 한국 안보에서의 미국 및 일본의 가치를 제대한 얻기 위한 냉전한 자세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⁵¹ 경향신문 1969 년 11 월 26 일 3 면 기사 오키나와 반환 뒤한·미·일의 3 각관계 미국의 부담 차츰 일본으로

제 4 장 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발표 후

제 1 절 동아일보

공동성명의 발표까지 동아일보 주장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미군의 군사적 평가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하며 미국의 거대한 국력으로써도 아시아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면 누가 성공적으로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도 나타내고 있었다. 오키나와 반환이 현실화하는 발표 후의 흐름을 통해 동아일보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같은 진영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한 한국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어내려고 생전 전략을 짜내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중시해야 되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 싶다.

발표된지 얼마 안되는 1969 년 11 월 27 일 사설에는 ‘한국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일본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오키나와 문제 이전에 담당하고 있었던 극동 방위 문제를 일본도 한몫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여 일본 Regional power 를 인정하였을뿐더러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었다.⁵² 이것은 일본 국내에 존재하던 좌경(左翼) 세력을 우려하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내심을 엿볼 수 있다. 일본 좌경 세력들에 대한 반응은 나날이 커졌고 1970 년 3 월이 되면 그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입으로는 反共(반공)이라 하면서 행동으로 容共(용공)이라고 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⁵³ 이것은 사토 및 외무 장관 등

⁵² 동아일보 1969 년 11 월 27 일 2 면 사설 한일민간협력의 촉진

⁵³ 동아일보 1970 년 3 월 10 일 2 면 사설 日本의 対北傀 二重外交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이 공상국의 被侵을 당할 경우에는 출병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한 사실을 포함해 일본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뒷받침하면서 보다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안보 문제는 항상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논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동아일보 주장은 같은 진영에 속하는 일본이 반대 쪽인 공산주의 세력들, 즉 한국과의 대립하는 진영과의 사이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강하다. 다만 일본은 자주 외교를 실현하는 가운데 진영 논리를 넘은 관계를 구축하고 노력하고 있었고 진영 논리에 깊이 들어가 있던 한국과는 같은 진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립, 적대 의식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7 월이 되어도 한일간에서의 대립은 보다 심해지었고 드디어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確言할 수 있다’ 고 주장하여 일본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나왔다.⁵⁴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경제적 지원이고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사실 6 월에도 안보 문제는 이제 일본 국민 전체의 큰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다⁵⁵ 고 하여 한일간에서의 안보 문제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본에 대한 실망과 단념을 같이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칼럼이나 기획에서는 일본에게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여전히 많았고 ‘일본은 아시아를 리드할 수 있는 델리케트한 역할을 하기 위해 기본적 변화를 해야된다. 일본인은 그의 운명이 아시아 다른 나라의

⁵⁴ 동아일보 1970 년 7 월 14 일 2 면 사설 美軍減縮과 日本의動向

⁵⁵ 동아일보 1970 년 6 월 23 일 日本安保 送扱の年代 富와安定으로 關心약화

운명과 굳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⁵⁶, ‘미국이 극동 지역에서 退潮的인 방향을 시행하면 할수록 일본의 대역(代役)은 커질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⁵⁷, 만약 일본이 중공 쪽에 가까워지면 극동에 있어 세력 균형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자유 진영 국가들의 크나큰 충격과 불안은 주게 될 것이다.⁵⁸ 등 일본 정부 및 국민의 극동 안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1970 년 내내 동아일보는 일본의 좌경 세력의 확대를 불안시하고 경계하면서 자유 진영과 대립하는 진영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에게 비판과 반성을 계속해서 촉구하였다. 진영 논리에 따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한국과 자주외교를 실현하면서 국내 통합을 도모하는 일본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군사적인 지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명확한 협력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일본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산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명확한 발언 및 태도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일간에서의 대립은 1961 년이 되어야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비로 동아일보에서의 중공에 대한 자세가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71 년 6 월 14 일 “새 시대의 국가 안보”라는 사설에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공이랑 삼극 구조는 극동 지역에서뿐만아니라 서양 지역에선 잠정적인 평화 무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겠다’⁵⁹ 고 하면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하였을뿐더러 ‘우리들의 안보 정책은 지금까지 皮相的(피상적)인 면에만 그친나머지 不毛的(불모적) 논의와 비생산적인 타성에만 해매온

⁵⁶ 동아일보 1970 년 8 월 22 일 美軍은 떠난다 防衛線西太平洋으로 後退

⁵⁷ 동아일보 1970 년 10 월 21 일 2 면 사설 사또訪美

⁵⁸ 동아일보 1970 년 11 월 일 2 면 사설 中共의 対日不侵提議說

⁵⁹ 동아일보 1971 년 6 월 14 일 2 면 사설 새 時代의 国家安保

일은 없었던가? 국가 안보정책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국민적인 단결을 추구하고 초당적인 자세를 세워야만 할 것인데도 이걸 단락적으로 정쟁의 도구로서 남용되는 일은 없었던가?’⁶⁰라는 진영 논리를 이용해 단락적으로 결론을 내온 자기자신들의 자세에 대해서 반성의 마음을 보였다. 이러한 반성은 과연 무엇이 새 시대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기여되고 있는가를 대답하게 검토할 과정에 이어져 새 안보 인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아일보에서의 이 변화는 세계를 불문하고 평화 무드에의 전환 및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대립하는 진여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세에서 새 출발으로서 한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설 “한국안보의 새 還流”에서는 ‘한국의 안보 문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이르고 있다’⁶¹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의 동맥을 살펴볼 때, 한국의 안보는 이러한 외세의 관계를 도외시하고는 어떠한 해답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것은 외세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종래의 입장과는 다르다. 물론 외세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없지만 자주적으로 한국 안보를 생각하려고 하는 의사를 느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안보 인식의 변화는 일본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서는 ‘자국의 이해 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제 외교 관계로 되다시 피한 기브 앤드 테이크란 불문율의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습성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⁶² 있다고 일본을 비판하면서 ‘오키나와의 반환 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일보의 업무가 더욱 커졌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 세계에 대한 보다 큰 공헌을 해야 한다는

⁶⁰ 동상

⁶¹ 동아일보 1971년 7월 1일 2면 사설 한국안보의 새 還流

⁶² 동아일보 1971년 6월 17일 2면 사설 오키나와 반환 협정

것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⁶³ 고도 요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극동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 좌경 세력인 야당들에게 큰 불신감을 품고 있는 것과 연결한다. 진영논리나 대립을 넘어서 협력을 실현해야 된다는 세계 흐름과 이상은 말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중공에 대한 반대 의식을 뿌리 깊이 남아 있었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도 좌경 세력이 촉진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한번이 아님 몇번이나 보게 되었다.

또한 오키나와가 반환된 사실에 관해서는 일본에 반환되더라도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기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전략/전술적인 기능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는 닉슨·사토 공동성명이 발표하였을 때와 다름이 없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가 없이는 극동 지역에서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장차 일본의 대내외 정책의 향방이 특히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부 아시아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⁶⁴ 이라고 하여 극동 안보에 있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도 일본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간접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력을 가리키면서 일본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성을 말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조항에서의 ‘한국 안보와 일본 안보가 직결된다는 말은 만약 한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닐것이고 그것은 가령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시사하는 이야기’⁶⁵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한국의 안보 문제는 미일 양국관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 ‘극동의 안보 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할때 오키나와의 반환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미일간에 있어서 문제의 종결이

⁶³ 동아일보 1971년 6월 17일 2면 사설 오키나와 반환 협정

⁶⁴ 동아일보 1971년 6월 17일 2면 사설 「오키나와」의 반환

⁶⁵ 동아일보 동상

아니라 오히려 시발’⁶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어 일본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주시할만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될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아일보는 일본을 바로 진영 논리로 보지도 않고 완전히 대립하는 상대로서 인식하지도 않고 일본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도려하였을 때,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⁶⁶ 동아일보 1971년 6월 17일 2면 사설 「오끼나와」의 반환

제 2 절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요구하는 일본의 Regional power 역할을 명확히 가리키는 사설이 1970 년 2 월 28 일에 나왔다. 우선 현재 일본 정부의 한국 안보에 대한 태도를 ① 한국에 위기가 발생하여 주일 미군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 협의를 긍정적으로 응하는 것 ② 정규전화하는 경우, 미군의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안보에 긍정적으로 협조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입각해서 경향신문이 일본에 요구한 역할을 경제적 군사적 협력과 정치적 협력이었다. 정치적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과 외교 활동을 할 때마다 사설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반복하였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政教分離 (정경분리)를 요구한 것이었다. 일본이 대공산국 접촉에서 명분상의 제약마저 받지 않으면 한일 정치 관계는 극히 불균형한 상태에 봉착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경제적 군사적 협력만으로는 분단 국가로서 위협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적 관계에서도 단순한 문리적 안보 체제는 충분치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설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1970 년 초반의 단계에서 일본의 Regional power 로서 역할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경제적 군사적 협력이었다는 것이다. 아직 공동성명 발표된지 3 개월 밖에 안되는 시기에 일본이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서인지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은 경향신문에서는 없었다. 사실 1970 년 4 월에 열린 “일본의 역할과 미국의 대극동 관계” 라는 학회에서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그런 지역 안보 협력에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겠’ 다⁶⁷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극동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 역할에 관해서는 한계를 시사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다. 아울러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⁶⁷ 경향신문 1970 년 4 월 14 일 2 면 미국의 극동 전망과 일본의 역할

대한 책임도 관심의 정도를 넘어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⁶⁸고 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이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방위 산업의 한일간 분업체제 확립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구체적 관심의 표현으로 평가’⁶⁹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볼때, 일본에게 요구하는 역할로서는 역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었다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반면에 죄담에서는 경제 면에서의 일본의 자세가 예고이즘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하여 ‘거리가 가깝고 접근이 쉽다고 일본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다른 서구 지역과의 제휴를 통한 경제교류의 다원화 내지 분산이 요청됩니다.’⁷⁰라는 일본에게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소개하면서 시종 일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였다. 이를 밀어준 것은 국군현대화를 실현하면서 자주 방위를 띄는 자세였을지도 모른다.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극동 지역은 중공/소련/미국 3 대 세력이 만나는 장소이며, 미국이 큰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극단적인 행동은 안할 것이라고 하여 냉정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접근은 ‘선(先)정치적 접근, 후(後)군사적 접근’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⁷¹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군 감축을 군사적 의타적(依他的) 자세를 자조적(自助的) 자세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타율적인 외적 요인이라고 하여, 자주 방위를 목표로 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일본의 입장에 불신감을 나타내고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⁶⁸ 경향신문 1970년 7월 17일 1면 칼럼 한·미안보의 새좌표 미군감축이 물고 올 파장 그 다각분석

⁶⁹ 동상

⁷⁰ 경향신문 1970년 8월 13일 1면 새출발점에 선 한미일 3각시대

⁷¹ 경향신문 1970년 7월 14일 1면 칼럼 한미안보의 새좌표 미군감축이 물고 올 파장

드리난다’⁷² ‘오늘날 이렇듯 양다리 외교로써 실리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악명 높은 經濟動物像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다’⁷³ 고도 하여 일관해서 대공산국과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고 있었다.

오키나와가 반환되는 데에 있어서는 ‘군사면에서는 여전히 미/일 안보체제를 핵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지탱하는데 허점이 없도록’⁷⁴ 애쓰다고 하여 발표 전부터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오키나와의 군사 기능 면에서도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그대로 남겨주지는 안하였기 때문에 과고와 다름없이 아시아의 발진 기지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것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한국조항의 내용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동성명을 고려한 의미에서는 반환 전보다 집단 안보 체제가 강화되기 위한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생각을 종시 고수하였다.

경향신문은 일관해서 일본을 진영 논리에 따라 이해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였다. 세계가 평화 무드에 빠져나가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불안감 및 대립이 지속하는 현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일본의 경제력 그리고 한국의 勝共對決精神이 다 같이 하나의 통일된 방위력’⁷⁵으로 형성하는 것을 요수해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새 전략에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향신문은 빠른

⁷² 경향신문 1971년 11월 13일 2면 사설 탈대미의존형 안보개발을 위해

⁷³ 경향신문 1972년 1월 25일 2면 사설 일소 접근과 태평양지역 국제현실은 어떠할까

⁷⁴ 동상

⁷⁵ 경향신문 1972년 1월 10일 2면 사설 미일정상회담과 새로운 시대의 우리 국의 추구

시기에서 일본의 Regional power 를 경제력이라는 특정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경향신문에 있어서는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일본의 역할은 이전의 미국 역할을 대체하는 큰 역할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마련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견해에 어느 정도 양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미군의 감축이 그다지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찰과 한국의 자주 방위를 위한 국군 현대화 등 모든 요인들을 감안한 끝에 이끌어낸 주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제 5 장 결론

1960년대 후반, 같은 진영에 속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늘 느끼던 한국과 국내적인 혼란이 지속하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병사들을 보내던 반면에 일본은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조차 국민의 심한 반발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전국가와 기지국가의 차이를 넘어서 국민 차원에서 냉전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다르고 있었음 나타낸다. 일본은 평화적인 무드에 잡혀 전국에서 대중 운동이 전개되고 이를 극복하려고 오키나와 반환에 급급하였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군의 철수 문제야말로 생가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것아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오키나와에 대한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키나와는 자유 진영을 위한 미군의 군사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존재이고 오키나와 문제는 미군 기지를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사토 공동성명 및 한국조향을 한일 두 정부가 처음으로 양국간 안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된다고 해도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반환 이후 극동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안보적으로 고생을 겪고 있는 한국을 배려한 내용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안보적인 위협을 방지 또는 연화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계기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서로 다르게 다루었다. 발표 전에 있어서는 둘 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기사가 많았으나 반환 이후도 존재하는 미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둘 다 발표 후에도 일관하였다. 또한 발표 전은 동아일보도 경향신문도 진영 논리에 따라 주장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발표 후에 있어서 중시되는 것은 일본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이다. 이에 관해서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우선 발표 후에서의 기사 내용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일본의 국내 좌경 세력, 자주 외교 및 처 공산국과의 대외 관계에 관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이 많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분석한 1972년까지 중시 지속됨으로써 항상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는 처음에 일본의 Regional power를 한국 및 자유 잔영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으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의 모호한 태도와 좌경 세력 및 처 공산국과의 외교를 통해 군사적 지원이 아님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중공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하여 진영 논리를 이용해 단락적으로 결론을 이룬 자기 자신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의 마음을 보였다. 이러한 반성은 과연 무엇이 새 시대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기여되고 있는가를 대답하게 검토할 과정에 이어져 새 안보 인식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일본의 극동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중시 의견을 바꾸지 않아 한국 및 세계에 대한 큰 공헌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가 없이는 극동 지역에서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에 있어서 일본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주시할만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될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동아일보는 일본을 바로 진영 논리로 보지도 않았고 완전히 대립하는 상대로서 인식하지도 않았고 일본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일관해서 일본을 진영 논리에 따라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일본을 강하게 전제하였다. 왜냐하면 세계가 평화 무드에 빠져나간다고 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서의 새 안보 전략도 역시 대립을 상정한 같은 진영과의 협력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경향신문은 빠른 시기 즉 공동성명이 발표된 시기부터 일본의 Regional power 를 경제력이라는 특정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일본의 역할은 이전의 미국 역할을 대체하는 큰 역할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포함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견해에 어느 정도 양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미군의 감축이 그다지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찰과 한국의 자주 방위를 위한 국군 현대화 등 모든 요인들을 감안한 끝에 이끌어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 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계속 북한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향도 동시에 지켜봐야 되었었고 이성과 감정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왔다 갔다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다시 한국전쟁이 벌어진 계기 같은 위험성이 모리를 스쳐 지나가 반면 무조건 미군의 철수 및 일본의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위치에서 자기 생존을 생각해야 되었던 것이다. 그 자세는 물론 진영 논리를 완전히 빠져나가지지는 못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세계 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이분법으로 현실적이든 이상적이든 혹은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평가하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신문사로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둘 다를 섞으면서 나타난 복잡한 결과이었다는 것을 통감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제일 적당하고 균형 잡힌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본론에서도 오키나와에 관해 밀접하게 다루면서도 오키나와 사람들 목소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사를 표하고 싶다. 한미일 모든 국가가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보고 있었고 오키나와에서 살던 사람들의 안전이나 인간성을 존중 못하였던 것은 너무나 비통한 일이다. 지금도 지속되는 오키나와에서의 기지 문제 혹은 경제적 문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태도는 역시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싶다.

참고 자료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対日政策文書〈沖縄編〉第四刊
- 和田純・五百旗頭真 楠田實日記佐藤栄作総理首席秘書官の二〇〇〇日
東京：中央公論社 2001
- 외교문서
-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문학과지성사 2004 년
-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국민대학교 2011 년 일본학연구소 총서
- 菅英輝 『冷戦と日米安保体制-安保改訂交渉から沖縄返還交渉まで』 比較
社会文化 第9巻 (2003) 69~83 頁
- 김성주 1960 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현대북한연구 18(2),
2015. 8, 270-309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 崔慶原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년
- 최희식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45-1 호)
2011
-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베평론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6 집 2 호) 2014 년
- Havens, Thomas R. H.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권혁태 선린학생회관과 중일관계 국민국가의 논리와 진영의 논리

중국현대문학 제 60 호 pp. 191-218 1225-0716 KCI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년

-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沖縄・アイヌ・台湾・朝鮮 植民地支配から
復帰運動まで 新曜社, 1988. 제 18 장 境界の島々
- 권혁태 ‘국경’ 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 일본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탈영병사 東方学志 제 157 집 2012 년 3 월 113~116 쪽

- ◆ 신옥희 『테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 -박장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였는가?』 세계정치 14 2010 년 가을·겨울호
- ◆ 박테균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14 2010 년 가을·겨울호
- ◆ 瀬川高央-日米防衛協力の歴史的背景-ニクソン政権期の対日政策を中心
に- 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 年報 公共政策学 2007 年

ニクソン=佐藤共同声明及び沖縄返還に 対する韓国メディアの反応

－東亜日報と京郷新聞を中心に－

井上真衣

ソウル大学校 国際大学院

国際学科 韓国学専攻

1960年代後半、米国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により、アジアのアジア化を推進し始め、日本は、基地国家としての役割すらも国民の激しい反発によりままならぬ状況になり、沖縄返還を早急に進めようとしていた。このような状況の中、1969年11月21日、米国のニクソン大統領と日本の佐藤首相は共同声明を発表し、沖縄返還が約束された。共同声明における韓国条項は、日本が韓国との安保協力をより積極的に実行し、沖縄が返還された後も、極東地域での安全保障体制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力をしていくと表明したものであった。したがって日本は沖縄返還以降、極東地域における Regional power としての役割を遂行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これは北朝鮮との対立により苦しい状況におかれていた韓国に配慮した結果でもあり、韓国側からすると、沖縄返還による安全保障面での危険性を防止及び軟化させるための必須条件であった。

本論では、共同声明と韓国条項を通して、日本が極東地域における Regional power としての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という事実を、韓国のマスコミはどのように受け入れ、韓国の安全保障政策に反映しようとしたのかに関して、東亜日報との京郷新聞の二紙を用いて分析した。

東亜日報と京郷新聞の共通点として挙げられる事は、一貫して沖縄返還後も存続する米軍の役割を重視し、返還自体を深刻な影響を与える要因とは捉えて

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同時に、日本国内の左派勢力及び自主外交、共産国との対外関係などのへの批判は展開された。しかし、日本の Regional power としての役割に関しては、異なる見解を表した。東亜日報の場合、返還後の日本の役割を、韓国と自由陣営に対する軍事的な支援として受け入れたていたが、中国の国連加盟を契機に陣営論理に従った見方を改める方向性に転じた。ただし、日本の役割に関しては終始意見を変えず、韓国と世界のための貢献を求めた。なぜなら、沖縄が日本に返還された場合、米国は日本との事前合意がなければ、軍事行動に制約を受ける他なくなった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東亜日報における日本は、陣営論理を越えても、重要な役割を持った注視すべき国家として存在する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た。

一方、京郷新聞は、共同声明が発表された時期から既に、日本の役割を経済支援という特定の側面から理解していた。つまり、共同声明と沖縄返還に伴う日本の役割は、以前のアメリカの役割を代替する役割として解釈するのではなく、ある程度の限界を含んだ役割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のである。これは、日本の見解に譲歩した結果とも言えるだろうが、アジアにおける米軍の撤退が韓国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程度の規模で実施されないという洞察と自主防衛のための韓国軍の近代化など、すべての要因を考慮した末に導かれた主張だったと推測できる。

1960年代後半、韓国では北朝鮮の脅威をより間近に感じながら、米国と日本の動向をも同時に見守らねばならなかった。米国や日本に強く要求する場合、再び戦争を触発する自体になる可能性もなく、また一方で、無条件に米軍の撤退と、日本の政策転換を歓迎することもできない複雑な立場から自身の生存戦略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それはまさに、理性と感情、現実と理想の間でもがく韓国の姿であった。その姿勢は、陣営論理を完全に抜け出すことはなくとも、柔軟な立場で世界の流れに合わせ、自身を変革しようとする姿勢であった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主 要 語：ニクソン=佐藤共同声明，沖縄返還，京郷新聞，中央日報，安保
学生番号：2015-25063